

## 아소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정책

###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9월 24일 일본 아소정권의 출범과 함께 향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임자인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 여소 야대의 구도아래에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야당의 견제로 인해 주요 현안들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후쿠다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였다. 마침내 2008년 9월 1일 후쿠다 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2008년 9월 22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경선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하였고, 아소 자민당 총재는 동년 9월 24일 중·참의원 양원에서 열린 총리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2대 총리로 선출되었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 의한 아소 내각이 출범하였다.

아울러 일본 정국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로 돌입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아소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49.5%)은 아베 내각(70.3%)이나 후쿠다 내각(57.5%)의 출범 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아소 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차기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달려있는데,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다.

아소 총리 및 내각은 총선을 최우선하는 정치적 및 정책적 행보를 할 것이다. 이전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共鳴)이었고, 아시아 외교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아소정권도 이와 같은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의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강경론자이지만, 공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인물이다. 지난 외무장관 시절에도 주변국가를 자극하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신중한 행보를 하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옹호론자이면서도 2008년 8·15에는 후쿠다 총리의 방침에 따라 참배를 유보하였다.

아소 총리는 차기 중의원 총선을 고려하며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소 총리는 (1) 미·일동맹의 강화, (2) 국제협력, (3)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 중시 등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여기에 아소 다로 총리가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으로 재임 시 제시했던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의 전략 구상이 대외정책노선의 기조에 투영될 것이다.

2006년 11월, 당시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이었던 아소 다로는 대외정책의 구상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를 제시하였는데,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의 핵심내용은 ‘보편적 가치’를 기조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 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동유럽, 중동, 인도대륙, 동남아, 동북아를 연결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

국가'들을 지원하며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형성·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은 지미파 그룹에 의해 주도되어 작성되었고, 미·일동맹을 보완·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투영되었다. 그러므로 아소 정권은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중시외교 추진의 공명(共鳴)을 계승하면서도 미·일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추론된다. 즉, 아소 정권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한·일 '성숙한 동반자 관계' 등을 추구할 것이다.

아소 총리는 2008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한 핵 불능화 과정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본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아소 정권의 대북전략이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소 정권의 대북전략은 대체로 (1) 미·일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내에서 (2)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노선을 계승하여 일정 부분의 성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개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소 정권은 2008년 8월 선양(瀋陽)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합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조치에 전략적이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갈 것이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아소 총리의 대외전략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아소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상황 전개 및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에 따라 대화와 협상에 비중을 둔 후쿠다 정권의 대북전략보다 한층 강경한 대북전략을 전개할 수도 있다.

